

구분	김도연	오환섭	장성구	정완용	정진영	한균태	황주호
출마 이유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경희대학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학생이 주체가 되고 행정·총장은 책무를 다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수·행정보직자로서의 전문성 살려 살려 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맞은 대학, 경험을 바탕으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정확충	동문·기업·정부와의 협력 및 연구를 이용한 창업으로 가치 재창출.	정부 지원 과제,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기술 이전, 창업, 발전기금.	전문 업체 활용, 전담 CFO 임명, 기부자 예우 개선.	국책사업·산학협력·시설활용 등 대내외적 전략활용.	양 캠퍼스에 대규모 R&D밸리를 건설해 대규모의 재정 확충.	참여 지원 및 연구기금을 통한 수입원의 다양화, 지출 효율화.	총장 주도 기금모금체제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미래수요 프로젝트 준비.
교육혁신	구성원과 함께 대학 교육에 혁명적 변화를 고민할 것.	신지식과 전통학문의 융합체계, 사회진출 목표 측정해 인증제도 운영.	ICT 활용, AI 접목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인재 양성.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추구, 교수 연구 역량 강화.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 시대에 걸맞은 강의 증설.	교양 교육 혁신 추진, 융합교육 신규과목 개설, 산학연계 확대.	융합전공·현장실습 확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실현.
유학생 지원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중요하지만 대학 형편 따른 방안 필요.	유학생 학습 관리지원 행정기구 마련, 입시전형 재정립, 우수 외국인 유치.	교육목표 설정, 여건개선과 생활안정 및 지원 업무 전담 부서 운영.	내국인 학생-외국인 학생-교수가 참여하는 3자 멘토링 제도’ 시행.	국제학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양 캠퍼스 국제학사 건립.	학업 지원 및 전담인력 배정, 예산 증액, 센터 설립.	학문별 기준 정비, 국제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연구역량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학, 한의학 분야 우선 육성.	글로벌 공동연구, 장기적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석좌 교수 제도를 확대.	연구과제 수탁 지원과 융합연구 발굴, 보직자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한 연구 성과평가, 인사관리 제도 개선.	산학협력관 건설, 연구센터 6곳 집중 육성, 석학육성프로그램도입.	국제교류 구축, 연구부총장직 신설, 실험 공간 확충.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 학문 분야별 우수 선임 및 거장 교수 영입.
학문 후속세대 양성	대학과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가 근본적 방안.	창업경진대회, 학부 장학 혜택으로 대학원 사전 입학제도 실시.	학부과정에서 교수, 대학원생의 연구에 참여.	대학원 진학 동기 부여, 대학원 진학 이후에 대한 비전 제시.	장학제도 도입, 연구프로젝트, 실험에 학부생의 참여 활성화.	석·박사 연계과정 확대, 장학금과 연구수당 확충.	장학지원을 통한 동문 간 학문세대 연결, 연구비 지원.
소통	학생, 교직원, 동문과의 소통을 위해 ‘개방’ 지향.	거버넌스의 슬림화, 회의체 개선, 업무지원팀 신설, 교류의 장 기획.	총장 직속 제안 처리기구 설치, 구성원 참여 확대.	구성원과의 창구 마련해 학교 발전 방향,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학평의위원회 활성화, 본권화, 구성원과의 상시 소통 약속.	소통 채널 상시 가동, 프로그램 만들어 총장실을 ‘열린공간’으로.	절차라는 필요조건에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을 더할 것.
권력형 인권침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 관용은 없을 것.	다양한 권력형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전문가 및 조직 영입.	교직원, 학생 대상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학칙에 인권침해 방지 규정 제정, 인권세미나 개최 지원.	옴부즈 제도 전문적 운영, 경희인권센터 도입 검토.	교육 프로그램 강화, 감사와 징계 엄격히 적용.	예방교육 영상 후기 공모전, 발표회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예비 후보 7명 정책 인터뷰… ‘재정·소통’ 최우선 과제로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달 2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 홈페이지에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 7인이 공개됐다. 우리신문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예비 후보자 7명의 정책 인터뷰를 진행해 답변을 들었다. 그 결과, 모든 총장 예비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에 재정 확충과 소통을 제시했다.

최근 우리학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문제에 학내 구성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201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로 높은 편이다. 재정 확충을 위해 7명의 후보자는 키워드로 기부금 확충과 정부 주도 사업 수주를 언급했다. 또한 모든 예비 후보자가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

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모든 예비 후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연구 역량 강화, 학문 후속세대 양성 실패 등 현재 학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에도 대응책을 내놴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 생간의 연결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공통 키워드 또한 제시했다.

답변 내용은 이번 신문 4면에서 10면까지 대학주보 선거 보도 준칙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됐으며 편집 기준도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됐다. 또한 후보자에게 부여된 기호가 없는 관계로 총장후보추천 행정지원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나다’ 성명 순서로 배치됐다.

한편 지난 2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은 예비 후보자의 정책, 출마의 변, 후보자 소개가 담긴 이메일을 구성원에게 발송했다.

<예비 후보자 7인이 답변한 질문지 전문>

[대질문]

-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로 나오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후보자의 최우선 정책 공약을 소개해주십시오.

[경영]

- 최근 많은 대학이 각각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의 불안정은 안정적인 대학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에게서는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과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현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존재합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우리학교 교육설문조사단은 ‘경희

대 주력 과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의 주된 인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추구하는 교육 혁신의 핵심 주제와 실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학교 유학생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지원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

- 우리학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 전과는 다른 본인만이 가진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우리학교 학사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에 전념하고 자율적 연구 수행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소통]

-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대학가에서 여러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교수에 의한 ‘갑질’ 혹은 성폭력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타]

- 현재 교육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LINC+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1면에서 이어짐

순서는 제1후보, 제2후보, 제3후보로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법인에 추천될 때에는 삭제된다. 제1후보는 교수 측 최다 득표자로 결정된다. 제2후보는 직원·학생 측 최다득표자로 결정된다. 단, 제1후보와 같은 경우 직원·학생 측 차순위 다득표자로 제2후보가 결정된다. 제3후보는 교수 측 차순위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직원·학생 측에서 결정된 제2후보와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차순위 다득표자로 결정된다.

또한 시행세칙에는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의 범위부터 총추위 구성과 역할,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총추위 이명웅 위원장에 의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선관위 구성과 같은 일부 급박한 시행세칙은 같은 날 열린 3차 총추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상기 내용은 총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합의문에 따라 오는 4일 열린 4차 총추위 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는 교수 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30일 구성원 대표들은 합의문과 함께 ‘절차상 공정성을 현격히

위반한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해당 결의사항에는 강제식 교수를 비롯한 교수의회 의장단과 송상호 교수 위원, 제1노조 한상 위원장, 제2노조 장백기 위원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 회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전완주 회장이 서명했다. 구성원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미 10월 16일 있었던 1차 총추위 회의에서 6인의 후보자를 최종 예비후보로 결정했었다”며 “때문에 10월 23일 열린 2차 총추위 회의에서 10월 18일 접수한 1인을 추가해 총 7인으로 수정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현격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외부 추천인은 반드시 3인 이상의 사회자 명인사의 추천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후보자를 접수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 행정지원단(지원단)은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일 뿐”이라며 “김 예비 후보자는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예비 후보자가 처음 추천 접수된 시점은 10월 9일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였던 총추위 추천에 의한 후보자 물색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원단이 행정상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은 이후 총장 예비 후보자 참여 의향을 묻는 과정이다. 1차로 참여 의향을 묻는 과정은 별다른 문서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때 6명의 추천 후보자 중 4명은 지원단이, 김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은 법인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의향 타진이 누락됐다는 것이 지원단 측 주장이다.

이에 지원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1차 총추위 회의에서 이 임시위원장이 ‘6명의 공모자가 지원했고 6명의 추천 후보자는 고사중임으로 6명으로 압축됐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최종 예비 후보자를 확정 의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서면 확인 과정에서 김 예비 후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차 의향타진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 2차 총추위 회의에서 김 예비 후보자의 ‘총장 예비 후보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발표한 결의문은 10월 30일 구성원 대표자 논의에서 채택한 합의문과 함께 총추위에 전달, 접수된 상태로 이어질 4차 총추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